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온라인	알펜시아 계기로 공정거래법 개정...지방 공기업 입찰 감시 ...	1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특례·학교 급식실 환경 점검	2
江原日報	03면	"6개월 앞둔 청소년동계올림픽 홍보 부족"	3
江原日報	15면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만전"	3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2024대회 청소년 참여 전국 시·도교육청에 협조요...	4
		[의회소식] 강원도의회,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현장 점검	5
강원도민일보	03면	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유순옥·부위원장 원...	6
江原日報	03면	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유순옥 도의원 선임	7
	온라인	여성수련원장 첫 인사특위 구성...9월 청문회	7
	온라인	도의회,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 특위 구성	8
	온라인	환동해본부 역사 속으로, 해양수산 기능 강화	9
江原日報	16면	"지역발전 걸림돌 농업진흥지역 해제"	10
강원도민일보	22면	도개발공사 취약계층 주거개선	10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동해안권 경제 신동력 '야간 관광'	11
江原日報	02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12
THE Lead	온라인	이한영 의원 "폐광지역 등 인구소멸지역으로 이전 기업에 ...	13
강원도민일보	21면	특자도 성인지 예산 활용안 논의 25일 도여성가족연구원서...	14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위 부위원장	14
江原日報	01면	폭우에 산불 피해지 산사태·도심 빈집 붕괴 걱정인데... 재...	15
江原日報	01면	"지하도·저지대 철거 점검 ... 도민 안전 최우선"	16
江原日報	02면	강원자치도 집중호우 대책 마련 긴급 회의	16
江原日報	02면	집중호우 대비 교육 당국 비상체제 유지	17
江原日報	03면	여야 정쟁 멈추고 수해 현장行 국회 상임위 일정도 전면 연...	18
江原日報	04면	"복숭아 한 개도 못 건졌다" 수확 앞둔 농가 초토화	19
江原日報	05면	토사 덮치고 도로 침하 ... 나흘째 귀가 못해	19
江原日報	05면	정선서 급류 휩쓸린 80대 숨진채 발견 ... 사망자 2명으로 ...	20
江原日報	08면	尹 "공무원들, 집중호우시 현장 나가 대처해야"	20

江原日報	08면	“지하차도 참사 1시간 전 긴급통제 요청 112 신고”	21
江原日報	08면	“사망·실종 49명 … 지하차도 사망자 13명”	21
江原日報	02면	강원특별법 3차 발의 누가 맡나 … 총선 앞두고 촉각	22
강원도민일보	02면	'지역 투자펀드' 신설에 지방소멸기금 배분 감소 우려	22
강원도민일보	07면	춘천·원주 제외 강원인구 10년간 5만명 감소	22
江原日報	04면	장맛비에 동해안 해수욕장 썰렁	23
江原日報	01면	내일까지 '최대 120mm' 다시 폭우	2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정부 권한 이양, 돈도 함께 와야	2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 붐업 나서라	26
江原日報	19면	[사설] 지역-혁신도시,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해야	27
江原日報	19면	[사설] ‘극한호우’ 대응, 지금까지 방재 대책으론 안 돼	28

2023 07 17 ()

KBS 춘천

알펜시아 계기로 공정거래법 개정...지방 공기업 입찰 감시 강화



[앵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입찰 담합 의혹이 있었다는 KBS의 보도 이후, 국가가 공정거래법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지방 공기업의 공개입찰 과정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들여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1년 KH강원개발에 매각된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7,115억 원에 넘겼는데, 줄곧 험값 매각과 입찰 담합 의혹에 휩싸여 왔습니다.

입찰 부정 의혹의 핵심에 있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KH 그룹 배상윤 회장은 모두 형사 입건된 상태입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지만 강원도개발공사는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공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새롭게 개정됐습니다.

골자는 공정위의 자료 제출 의무 대상에 지방 공기업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공정거래위원회에 몇 가지 물어봤더니, 법의 미비로 지방 공기업의 경우에 있어서 공정위가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할 요건들이 없다. '아, 이겁니다.' 싶어서."]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지방 공기업의 입찰 과정을 이제 공정위가 직접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알펜시아 사태를 계기로 지방 공기업의 입찰과 계약 과정에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기홍/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특위 위원 : "쉽게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벌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충분히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입찰 방해 혐의를 받는 최 전 지사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박성은

강원도민일보

2023 07 18 ()
03

도의회, 특례·학교 급식실 환경 점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두 번째 도정질의에 나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특례, 학교 급식 노동자 근무환경 등을 점검한다. 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8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제321회 임시회 2023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한다. 질의 의원은 조성운, 유순옥, 이기찬 의원 등 총 11명이다.

질의는 지난달 7일 공포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산림 특례와 △강원의국어고등학교 농어촌 자율학교 전환 △강원 육아기본수당 △학교급식실 근무 환경 △강원연구원 운영 성과 등 도정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이철화

江原日報

“6개월 앞둔 청소년동계올림픽 홍보 부족”

강원특별자치도의회들이 17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20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만큼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15면

도의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평창을 방문해 2018평창기념재단,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은 특히 대회가 아직 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심오섭(국민의힘·강릉) 특위 위원장은 “대회가 180여일이 남았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이 있다”며 “대회가 열리는 기간이 학생들의 방학인 만큼 지금부터 미리 교육청과 협조해 청소년들에게도 홍보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아직 주민들이 체감하는 홍보가

‘강원자치도의회 올림픽대회 지원특위’ 평창 현장점검

교육청 협조·지역 겨울축제 연계 통한 붐업 필요성 지적
청소년 꿈나무 선수 육성·안전한 대회 개최 등도 당부



부족하다고 지적한 최종수(국민의힘·평창) 특위 부위원장은 “평창 대관령 눈꽃축제, 송어축제 등 지역축제와 올림픽의 연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위 위원인 김기철(국민의힘·정선) 경제산업위원장도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비교했을 때 지역 문화

홍보가 부족하다”며 “특히 후원기업을 최대한 확보해 홍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래(국민의힘·강릉) 의원은 “도교육청과의 협력을 위해 도교육감을 직접 찾는 등 능동적으로 움직여 달라”며 “청소년들의 참여를 위해 도의회도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조직위 등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안전관리, 청소년 꿈나무 육성도 당부했다.

최승순(국민의힘·강릉) 의원은 2018평창기념재단을 향해 “유소년 선수들이 외국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내고 있는데 지원이 소극적으로 보인다”며 꿈나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규만(국민의힘·횡성) 의원은 유관기관과 협조해 안전문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고 홍성기(국민의힘·홍천)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열리는 국제 행사인 만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날 특위는 업무보고 외에도 평창올림픽기념관, 기념관 주변 복합공간 조성 사업현장,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 등을 찾아 2018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江原日報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만전”

〈2024강원〉

【평창】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지인 평창군은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심재국 군수를 비롯해 관련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상황 보고회를 갖고 분야별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대회를 187일 앞둔 가운데 개최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유관기관 및 부서 간 협업과 분야별 세부 지원 사항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심 군수는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이후 다시 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는 국제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번대회가 2018

평창군 보고회 열고 유관기관 협업 등 준비상황 점검 심재국 군수 “스포츠 메카 공고히 하는 계기 마련 최선을”



◇평창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상황 보고회가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을 확장, 계승하고 평창을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에 앞서 올 5월 부군

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행정지원본부를 구성, 총괄지원관, 총괄지원부, 홍보부, 행정지원부 등 14개 부서로 나눠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회 준비에 집중해 왔다.

내년 1월19일부터 2월1일까지 19일간 펼쳐지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대회로 7개 경기·15개 종목에 70여개국 2,9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평창, 강릉, 정선, 횡성에서 치러지는 대회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사용되었던 시설들을 활용, 올림픽 유산의 계승 및 지속가능한 올림픽이 될 전망이다. 조상원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7 18 ()
03

도의회, 2024대회 청소년 참여 전국 시·도교육청에 협조요청

지원 특위, 조직위와 시설 점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내년 1월 열리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청소년참여를 위한 전국 시·도 교육청 홍보를 강조하고 나섰다.

도의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오섭)는 17일 평창 대관령면에 위치한 2018평창 기념재단에 방문해 강원2024대회 조직 위원회로부터 대회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 알펜시아 스키점프 센터에 방문해 올림픽 시설 점검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선 대회 분위기 조성 등 홍보 활성화, 청소년 참여 유도를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 협조 요청, 시설 안전 점검 등이 언급됐다. 심오섭 위원장은 “청소년 올림픽이다 보니,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도내 청소년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청소년들도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강원2024대회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평창, 강릉, 정선, 횡성 등에서 열린다. 70여개국 29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청소년올림픽 대회는 동·하계 모두 4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동계청소년올림픽 역사상 유럽을 벗어나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첫 번째 대회이다. 대회 슬로건은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이다.

이설화

[의회소식] 강원도의회,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현장 점검



제1차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17일 평창을 찾아 대회 조직위원회와 2018 평창기념재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올림픽 준비 상황을 살폈다.

이어 평창올림픽기념관과 기념관 주변 복합공간 조성 사업 현장을 찾아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끝으로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를 방문해 시설관리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확인했다.

심오섭 위원장은 "200일도 채 남지 않은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특위에서도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위 구성 완료

(춘천=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제1차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유순옥(비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같은 당 원미희(비례) 의원을 선임했다.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위는 6개 상임위원회별 2명씩 도의장이 추천한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고창영 한국여성수련원장은 오는 10월 9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유순옥 위원장은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기본적인 공직관은 물론,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한국여성수련원의 새로운 역할과 비전, 자질과 역량을 집중해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위는 17일 제321회 임시회 1차회의 열고 유순옥(국민의힘·비례)의원을 위원장, 원미희(국민의힘·비례)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서영

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유순옥·부위원장 원미희

“수련원 새 역할 검증할 것”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순옥(국민의힘·비례)의원이 선임됐다.

도의회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위는 17일 제321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부위원장

은 원미희(국민의힘·비례)의원이 맡았다.

특위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하석균·한창수·박호균·최종수·김기홍·박대현·박기영·양숙희·엄기호·이승진 의원 등 총 12명이다.

유위원장은 17일 “후보자의 공직관



유순옥

원미희

에 걸맞은 한국여성수련원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 예정일은 오는 9월 11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의결일은 9월 14일이다. 이설화 lofi@kado.net

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유순옥 도의원 선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유순옥(국민의힘·비례) 의원이 선임됐다. 도의회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유 의원을, 부위원장에 원미희(국민의힘·비례)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위는 현 고장영 한국여성수련원장의 임기가 올 10월9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달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뒤 구성됐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권혁열 도의장이 추천한 12명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 하석균(원주)·한창수(횡성)·박호균(강릉)·최종수(평창)·김기홍(원주)·박대현(화천)·박기영(춘천)·양숙희(춘천)·엄기호(철원), 더불어민주당 이승진(비례) 의원이 포함됐다. 특위는 다음 달 말 강원자치도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을 접수하고, 9월 후보자대상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순옥 특위 위원장은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수련원의 새로운 비전, 수련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유순옥(국민의힘·비례)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박승선기자

2023 07 17 ()



여성수련원장 첫 인사특위 구성...9월 청문회



강원특별자치도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수련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17일) 도의회에서 '제1차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유순옥 의원과 원미희 의원을 각각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여성원장 인사특위는 도의회 6개 상임위별로 2명씩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현 여성수련원장의 임기는 올해 10월 9일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올해 9월 열릴 예정입니다.

송승룡

춘천MBC

2023 07 17 ()

도의회,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 특위 구성

강원도의의회가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순옥 의원을, 부위원장에 원미희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는 현 고창영 한국여성수련원장의 임기가 10월 9일에 끝남에 따라 구성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2명의 의원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유순옥 위원장은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는 특별자치도의의회가 출범한 이후 열리는 첫 청문회인 만큼 후보자의 공직관은 물론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승호

bsh@chmbc.co.kr

2023 07 17 ()

MBC 강원영동

환동해본부 역사 속으로, 해양수산 기능 강화

김형호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가
다음 주부터 강릉에서 업무를 시작하며
제2청사 시대가 열립니다.

특히, 강원도 수산사무소로 출발해
60년 넘게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해 온
환동해본부라는 이름은 사라지지만,
기능은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4년 강원도 수산사무소로 출발해
60년 넘게 강원 동해안과 내수면의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한
강원특별자치도 환동해본부.

4개 과, 3개 사업소를 운영하며,
공무원 인력 1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해양수산 업무를 총괄하며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과 어촌뉴딜,
미래 수산 핵심사업인 연어 양식기반 구축 등
해양·수산·관광에서 중요 역할을 해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글로벌본부 제2청사 시대가 열리면서
환동해본부도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김형호 기자]

환동해본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행정조직은 해양수산국, 건물 이름은
제2청사 환동해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획총괄과가 사라지고 양식산업과가 신설되며
해양레저와 해양관광 기능은 관광국으로
편입됩니다.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3개 국 체제의 더 큰 조직이 강릉 북부권에
자리잡는 만큼 기대감이 큼니다.

김형식 /강릉 주문리 어촌계장
"환동해본부가 있을 때는 어민들이 직접 찾아가서 부탁이나 어려운 점을 얘기했는데,
국 체제에서 한 단계 거쳐서 한다면
어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을 텐데
이런 점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해양관광 분야가 관광국으로 이관되는 부분은 공유수면 허가 관리가 해양수산국 업무인 만큼 조직 내에 소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그 이름만 해양수산국으로 바뀌는 것이지
기능은 기존보다 확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분야 특례를 반영해서 기능이 확대돼서
해양수산국을 잘 운영하기를..."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제2청사는 3국 1과 체제로 꾸려지는데
21일 인사발령이 나고,
공식 업무는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김종윤)

2023 07 18 ()
16

江原日報

“지역발전 걸림돌 농업진흥지역 해제”

강원자치도 도민설명회

철원지역 전략 사업 역설
군용지 활용 특례도 필요



◇강원특별자치도와 철원군은 17일 철원관광정보센터에서 한기호 국회의원, 이현종 철원군수,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 엄기호·김정수 강원자치도 의원, 박기준 철원군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철원】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철원군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원자치도와 군은 17일 오후 2시 철원관광정보센터에서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강원자치도 출범에 따른 강원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과 군의 향후 발전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는 한기호 국회의원, 이현종 철원군수,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

사, 엄기호·김정수 강원자치도 의원, 박기준 철원군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군은 박경우 철원부군수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지역개발 전략과 미활용 군용지 활용 특례 등에 따른 지역 전략

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고석정과 한탄강주상절리길 등 한탄강 관광지 주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지역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학저수지 일원의 규제를 풀어 주민 복

지 향상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과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정광열 강원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강원자치도는 뚜렷한 비전과 타당성 있는 지자체의 계획에 한해서만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법 개정과 철저한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종 군수는 “철원은 대부분의 농토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강원자치도 출범으로 철원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자치도 차원의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대호기자 mantough@

강원도민일보

2023 07 18 ()
22



도개발공사 취약계층 주거개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임직원과 문관현 도의원은 17일 태백 장성동 일대 주거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GDC 러브하우스’ 주거개선 활동을 진행했다.

江原日報

2023 07 18 ()
19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지역은 산과 바다가 빚어 낸 풍광이 더없이 아름답고 환경 또한 맑고 깨끗해 전국 제일의 관광지로 손꼽혀 왔다. 그러다 보니 음식·숙박·문화·스포츠·여

가 등 관광산업 분야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2019년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간한 ‘강원도 관광산업 현황과 시사점’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종사자는 18만1,000명으로 도내 전체 산업 종사자(78만9,000명)의 2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특별·광역시를 제외하고 제주(24.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

다. 이 중 동해안 지역은 관광산업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관광산업 경기가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다.

동해안 지역은 KTX 개통 이후 MZ 세대를 필두로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관광 수요의 많은 부분을 흡수하며 수혜를 입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했고, 그로 인해 동해안 관광산업은 본격적인 경쟁 상태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다.

강원포럼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현재 세계적인 관광산업 트렌드는 야간 경제관광이다. 런던은 2016년 뉴욕에 이어 지하철 주요 노선을 주말 동안 24시간 운행하는 나이트투브 정책을 시행하면서 야간 지하철 이용객의 60% 이상이 여행과 여가를 목적으로 하고, 대중교통 이용량의 4분의 1이 야간에 이뤄지며 약 160만명의 새로운 야간 일자리가 창

이에 관광서비스업이 주요 산업인 강원 동해안 지역은 이와 같은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춰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강릉의 경우 2016년 시작한 대규모 야간문화관광행사인 강릉문

화재야행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올해 행사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상황리에 열렸다. 최근에는 월화거리에 야시장을 개장하고, 28억원의 예산을 투입, 월화교 분수 조명을 설치했다. 솔향수목원은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야간 개장을 하는 등 야간 경제관광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서핑의 성지로 유명해진 양양의

경우 낮에 이뤄지는 서핑에 이어 밤에는 해변가의 음식점과 카페,

동해안권 경제 신동력 ‘야간 관광’

출되는 등 예상을 크게 넘어서는 성적표를 받았다. 또 현재 21개 국가 43개 도시에서 야간 경제활동과 문화, 관광, 여가 등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야간 시장(Night Mayo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이처럼 야간 경제관광이 화두로 등장하고 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현대인들의 수면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야간 활동과 욕구가 증가하는 현상에 기인한다. 더불어 이러한 추세는 점점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줄을 잇고 있다.

상점 등이 운영하는 나이트마켓이 서퍼와 관광객을 상대하면서 야간 경제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제 강원이 가진 가치와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이에 관광산업, 특히 동해안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야간 경제관광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 시민들은 야간 경제활동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활력과 낭만이 넘치는 밤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하겠다.

江原日報

2023 07 18 ()

02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강원도개발공사는 17일 태백 장성동 주거 취약계층 가정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러브하우스 지원사업을 벌였다.

‘GDC 러브하우스’는 ‘도민의 공기업’ 경영 방침에 따른 사회공헌활동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등의 주거 개선과 단열, 보일러 교체 등의 난방시설 개·보수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에는 문관현 도의원을 비롯해 김교섭 공사 혁신감사실장 등 임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일손을 도왔다. 또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작업자들의 안전과 하자 없는 시공을 당부했다.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지역 주민의 행복이 곧 강원특별자치도의 행복”이라며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주거취약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개발공사는 태백시를 포함, 올해 도내 18세대의 러브하우스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기영기자

2023 07 17 ()

THE Leader

이한영 의원 “폐광지역 등 인구소멸지역으로
이전 기업에 지원 대폭 늘려야”

이형진 기자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자료사진). 전경해 기자

(출처 더리더)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태백1)이 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산업국 및 경제국 업무 보고에서 ‘폐광지역 기업유치 인센티브 확대’ 및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 통.폐합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 지적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먼저, 지난 11일 열린 산업국 업무보고에서는 도내 투자유치 지원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도권 및 타시도 이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비 및 지방비로 이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이한영 의원은 “폐광·접경지역과 인구소멸지역으로 이전을 원하는 기업에는 지원을 대폭 늘려 춘천·원주·강릉과 차등해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다”고 지적하며, “폐광·접경지역 이전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내 지역 간 불평등 해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13일 경제국 업무 보고에서는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의 통.폐합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한영 의원은 통.폐합에 따른 이점에 대해 질의하며, 인력구조 및 사업 변화 등 예상 가능한 통.폐합의 효과들과 예산절감과 같은 이점에 대한 정확한 윤곽도 나오지 않은 채 진행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다른 시·도와 비교해 도내 출자·출연기관이 많으므로 유사한 기관간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출연금 절감의 좋은 방안일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과 강원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논의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수립이 먼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유사기관 통.폐합시 그 시너지 효과가 큰 만큼 침체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강원도민일보

2023 07 18 ()
21

특자도 성인지 예산 활용안 논의
25일 도여성가족연구원서 포럼

성평등한 강원특별자치도로 가기 위해 도민들과 함께 성인지예산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린다.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센터장 박해숙)는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 도여성가족연구원 강당에서 2023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발전 포럼을 갖는다.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성인지예산제도 추진 핵심과제'를, 안희정 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장이 '강원특자도 성인지예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성평등목표제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임혜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팀장 △강경숙 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임미선 도의원 △정유선 강원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김학렬도예산팀장이 참여한다. 강주영

강원도민일보

2023 07 18 ()
12

원특별법 3차개정 산림분과워킹그룹에 참석한다.



엄윤순(인제)도의회
농림수산
위 부위원
장은 18일

오후 2시 강원도청 제2별관에서 열리는 강

폭우에 산불 피해지 산사태·도심 빈집 붕괴 걱정인데…

재해 취약지 관리 나 몰라라

“비만 내리면 산사태가 날까, 잠을 못 자겠어요.”

지난해 동해안 산불로 집이 불에 타 현재 임시조립주택에서 살고 있는 A(74·동해시 괴란동)씨. 그는 1년째 산사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뒷산은 산불로 소나무 몇 그루만 남은 채 잡풀만 수북한 상황. 집 바로 옆에는 대나무를 베어내고 흙만 남은 2m 높이의 경사면이 40m 구간으로 있다. ‘폭포비’만 내리면 언제든 산에서 흙이 쓸려내려 올 수 있어서 청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2년째 묵묵부답이다. 결국 A씨의 아들이 지인을 동원해 경사면에 방초 매트를 덮어 놓았다. 경사면 위에 집이 있는 이웃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A씨는 “돌망태(개비온)가 어려우면 작은 수로라도 놓아 달라고 사정했지만 관계자들이 현장만 방문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산불 피해지역인데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강원지역 시·군 지자체들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주택가 곳곳이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17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중 산



◇동해 산불피해 주민의 임시주택. 흙만 남은 경사면에 방초 매트가 덮여 있다.

**동해안 산불 피해지 임시주택
경사면 보강 요청 지자체 묵살
산사태취약지역 전국3번째 많아**

**철거 안 된 노후 빈집들도 문제
당국 “직권 철거 어렵다” 주장**

사태 발생 우려지역 25개소(공유림·사유림 포함)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마쳤다. 하지만 A씨처럼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 있다.

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지역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올 6월 기준으로 2,892개소(거주민 4,718명)로 경북(4,935개소·9,977명) 다음으로 많다.

또 다른 붕괴 위험지는 ‘도심 내 빈집’이다.

17일 춘천시 약사동의 한 빈집 담벼락은 곳곳에 균열이 생겼고, 보행자 통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 식당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있는 상황. 주민 B(42)씨는 “비가 내리고 더 위험해져 언제 무너져내릴지 모른다”며 “밤이면 청소년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데 사고라도 날까 겁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춘천시는 ‘직권 철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고, 직권 철거 이후에도 소유주의 소송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지역 내 빈집은 8,344채(도시 2,500여채·농어촌 5,600여채)에 달한다.

강원자치도 산사태 업무 담당자는 “위험 요소가 확인되면 시·군과 협의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江原日報

“지하도·저지대 철저 점검 ... 도민 안전 최우선”

김진태 지사-18개 시장·군수 긴급 화상회의 ... 집중호우 대책 논의
붕괴 우려 시설 대응책 지시 ... 현장 공무원들 신속·선제 대응 당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18개 시장·군수는 17일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집중호우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타시·도의 심각한 피해상황을 도내 전 시·군에 공유하고 선제적인 분야별 대책과 신속한 대응태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최근 집중호우로 300mm 안팎의 비가 내린 원주시, 영월군, 정선군의 브리핑과 함께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 및 인명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예찰, 사전 통제, 주민 대피 조치 등 현장 중심 대응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진태 지사는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도로와 저지대 지역에 대한 꼼꼼한 예찰을 당부하고, 임시제방 등 집중호우로 인해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지난주 정선군 군도 3호선 산사태 당시 정선군의 빠른 판단으로 도로를 사전 통제해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시·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신속한 판단과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 중점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위험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의암댐, 춘천댐, 화천댐 등 북한강 수계 댐의 안전성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조했다.

김진태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안전이다. 무엇보다도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며 “집중호우가 당분간 지속되는 만큼 장마가 끝나는 날까지 사전 예찰과 현장 점검 등 대책 실시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민들은 집중호우가 잦아들 때까지 산, 계곡, 하천 등 위험지역에 대한 접근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기영기자

江原日報



강원자치도 집중호우 대책 마련 긴급 회의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18개 시장·군수는 17일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집중호우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1면

江原日報

2023 07 18 ()
02

집중호우 대비 교육 당국 비상체제 유지

안전 우려 상황 발생 시 등·하교시간 탄력 운영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잇따르자 교육 당국이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등·하굣길을 비롯해 학생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휴업 및 등·하교 시간 조정 등 학사 일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학교 및 관련 기관과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후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및 교육시설 피해는 1건이다. 지난

16일 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영월 녹전중 펜스가 일부 훼손됐다. 녹전중은 학생 안전 등을 고려해 18일 하루 휴업할 예정이다. 향후 지자체와 교육 당국의 협의를 거쳐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

전국적으로 이번 집중호우 기간 피해를 입은 교육 시설(학교 및 기관)은 총 50곳이다.

앞서 교육부는 향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현재까지 휴업 및 조기 방학 등 학사 일정을 변경한 학교

는 녹전중 외에 추가로 없다. 또 당분간 장마전선 정체에 따른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지침을 도내 각 학교에 전달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원지역 교육시설의 경우 큰 피해가 없었고 각 학교들이 본격적인 방학에 들어가는 시기라 조기 방학 등을 결정한 곳은 아직 없다”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고 했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2023 07 18 ()

江原日報

03

여야 정쟁 멈추고 수해 현장行 국회 상임위 일정도 전면 연기

당 대표·원내대표 등 지도부
충북 오송 참사 현장 등 찾아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하면서 여야는 17일 정쟁을 멈추고 수해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국회는 예정했던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도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모두 연기했다. 국가재난 속에서 정치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사무총장 등 여당 지도부는 정례 최고위원 회의를 취소하고 충북 청주시 오송 공평 제2지하차도 참사 현장과 희생자 빈소, 공주, 청양 등 충청지역 수해현장을 방문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현재 피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도당별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중앙당과 시·도당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긴급사태 발생 시 당

력을 하나로 집중해 신속한 대응 및 전 당원 복구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당원들이 소속 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인근 피해지역의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와 협의회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이재명 대표가 청주 오송 지하차도 현장을 찾은데 이어 이날 박광온 원내대표가 충남 부여·청양·공주 세 곳의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미뤘다. 당초 국토위는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원주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토위 전체회의는 적어도 수해 부분이 정리가 된 이후에 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에 제안하겠다”고 밝히면서 미뤄지게 됐다. 이날 예정됐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늦어지게 됐다.

서울=이하늘기자 2sky@

江原日報

“복숭아 한 개도 못 건졌다” 수확 앞둔 농가 초토화

각 시·군 잠정 집계 수해 면적 12.22ha ... 피해 더 늘어날 듯

원주 부론면 농경지 5ha 잠겨... 과수원 진흙투성이 엄두 못내
물폭탄에 농작물 무르고 썩어 수확하더라도 상품 가치 없어

강원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내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주일 넘게 이어지는 장맛비로 농작물 생육 부진 및 병충해 위험도 커져 수확철을 앞둔 농가들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도내 각 시·군이 잠정 집계

한 수해 면적은 12.22ha로 나타났다. 피해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로 전체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영월 6ha, 원주 5ha, 정선 1.2ha의 농지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가 집중된 영서지역에는 지난 13일부터 17일 오전 7시까지 원주 331.5

mm, 정선 311mm, 영월 306.8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졌다. 특히 충주댐 방류로 인해 원주시 부론면 농경지 5ha가 물에 잠기는 등 비 피해가 집중됐다.

원주 부론면 정산리에서 5,000㎡ 규모의 복숭아 농사를 하고 있는 윤창준(45)씨는 “갑자기 쏟아진 비와 충주댐의 방류로 하천이 범람, 과수원에 2m 이상 물이 차오르며 수확을 앞둔 복숭아를 하나도 건지지 못하게 됐다”며 “내년 농사를 위해서라도 방제를 서둘러야 하지만 밭이 진

흙투성이라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한숨 지었다.

침수 피해를 피한 농가들도 수확 시기를 놓치면서 농작물이 무르고 썩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정선에서 2만㎡ 규모로 배추를 재배하는 전제일(66·일계면 낙전3리)씨는 배추 수확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14일 시작된 장맛비로 3분의 1도 수확하지 못했다. 전씨는 “장마가 끝난 후 수확을 하더라도 배추가 빗물에 물러져

상품가치가 없을 것”이라며 “차라리 침수가 되면 피해 보상이라도 받을 텐데 장마로 인한 피해는 보상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19일까지 최대 1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되자 강원자치도와 각 시·군은 비상 대응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수해가 발생하면 신속 응급복구로 추가 피해를 막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재해대책 수립에 나서 농가들의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오미기자 omme@

江原日報

토사 덮치고 도로 침하... 나흘째 귀가 못해

‘비 피해 속출’ 원주 태장동·영월 영흥리 주민들

“나흘째 경로당에서 지내고 있어요. 얼른 비가 그쳐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영서지역에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수재민들의 고단함도 지속되고 있다.

17일 원주 태장동 절골경로당에서 만난 김기복(여·80·태장동)씨는 지적에 둔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허망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김씨는 14일 오후 6시께 집에서 불과 15m 가량 떨어진 높이 약 6m의 옹벽이 길이 30m 정도 무너지며 토사가 뒷문 앞까지 덮치자 남편과 함께 경로당으로 피신했다. 김씨는 “마실을 나가려고 집 문을 나서던 중 폭발음이

도내 64세대 100여명 대피
아직까지 10여명 대피소 생활

물 잠겼던 원주 부론면 농경지
진흙투성이 변해 망연자실
지자체 긴급 복구작업 벌여

들러 화들짝 놀랐다. 근처에 비행기라도 떨어진 줄 알았다”며 당시 사고 상황을 회상했다.

영월읍 영흥13리에 사는 전병철(68)씨는 15일 영월 속골-천문대삼거리 구간 도로 침하와 이에 따른 산사태 위험으로 대피한 지 사흘째 귀가하지 못했다. 전씨를 비롯한 주민들은 다행히 사전에 위험을 인지한

영월군과 정규복 영흥13리 이장 등의 도움으로 마을회관으로 대피할 수 있었다. 정규복 이장은 “지난 14일부터 큰비가 내려서인지 산에서 토사와 물이 폭포수처럼 내려왔다. 결국 15일 도로가 물의 힘을 버티지 못하고 순식간에 종잇장처럼 구겨졌다”고 말했다.

17일 잦아든 비로 대피 명령이 해제돼 집으로 돌아간 주민들의 표정도 밝지 못했다.

폭우와 충주댐 방류로 인한 침수 피해로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던 원주 부론면 단강1리와 정산1리의 주민 60여명은 진흙투성이가 된 농경지를 보며 망연자실했다.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다시 모습을 드러낸 지방도 531호선과 감자, 옥수수 등의 농경지는 수마가 할퀴고 간 자국이 선명했기 때문이다.

원주시에 따르면 15일 폭우와 충주댐 방류로 인해 부론면 일대 14만6,900여㎡ 규모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유주희 단강1리 이장은 “매번 침수 피해를 겪을 때마다 이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답답할 노릇”이라며 “아직 장마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부터 내린 비로 원주 35세대 64명, 영월 27세대 39명 등 도내 총 64세대 105명이 대피했다. 17일 오후 5시 기준 6세대 11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옹벽 붕괴지에 방수포를 덮고 침하 도로를 전면 통제하는 등 긴급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윤석·김인규기자



◇강원지역에 지난 13일부터 300mm 내외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영월읍 농어촌도로 속골에서 천문대삼거리 50~60m 구간이 엇가락처럼 침하돼 있다 (왼쪽 사진). 같은 날 폭우와 충주댐 방류로 물에 잠겼던 원주시 부론면 단강1리의 비닐하우스 내부가 참혹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江原日報

정선서 급류 휩쓸린 80대 숨진채 발견 ... 사망자 2명으로 늘어

강원지역에 닷새간 3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사망자가 2명으로 늘어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8분께 정선군 정선을 회동리에서 A(83·경기도 안양)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낮 12시께 용탄천 인근 농막에서 휴식을 취하고 귀가 하던 중 장맛비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드론을 비롯

태백·영동·중앙선 열차 운행 중단 국립공원 탐방로·하천 출입 통제

한 장비 17대와 인력 160여명을 투입, 실종자 수색 이틀 만에 농막과 3km 떨어진 곳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로써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15일 원주시 신림면 인근에서도 급류에 휩쓸려 60대 남성이 숨졌다.

하천 주변 둔치 주차장이 수일째

통제되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커졌다. 지난 9일 홍천을 시작으로 원주, 홍천, 횡성, 평창, 정선 등 5개 지역 강변 둔치 주차장 9곳이 통제되고 있다.

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산사태, 낙석을 피하기 위해 지난 14일 오후 6시께부터 태백선, 영동선, 중앙선의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 이때문에 철도를 이용해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다.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 등 3개 국립공원 48개 탐방로도 출

입이 통제됐다.

강원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유지 중이며,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비 피해 상황 파악과 향후 복구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3일부터 17일(오후 5시 기준)까지 누적 강수량은 원주 336mm, 정선 311mm, 영월 306.8mm, 평창 280.5mm, 춘천 207.5mm, 횡성 201mm, 태백 144.1mm, 철원 143mm, 홍천 133mm, 삼척 122.5mm, 화천 121.5mm 등을 기록했다.

이규호·김준겸기자

江原日報

尹 “공무원들, 집중호우시 현장 나가 대처해야”

중대본 주재·피해현장 찾아

이재민 만나 “정부가 다 복구” 신속한 복구 작업·지원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일대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이날 새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곧바로 헬기를 타고 수해 지역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이 찾은 감천면 마을은 마을 초입부터 안쪽까지 약 500m에 걸쳐 민가, 창고 등 대부분 시설이 토사에 휩쓸려 무너지거나 부서진 상황이었다. 83가구 143명이 살던 마을에서는 주택 30호가 이번 산사태에 휩쓸려 가거나 무너졌고 2명이 실종됐다.

윤 대통령은 진창길을 걸으며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이후 이재민 임시거주시설로 사용 중인 발랑리 노인복지회관을 찾았다.

이곳에서 80~90대 할머니 20여명을 만난 뒤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느냐”며 말을 건넸다. 한 할머니는 바닥에 앉은 윤 대통령 손을 잡으며 울먹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할머니들 앞에서 먼저 “저도 어이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해위에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무너져 갖고 민가를 덮친 모양이라고 생각했지, 몇백톤 바위가 산에서 굴러내려 올 정도로 이런 것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 가지고, (다들) 얼마나 놀라셨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서 좁고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참고 계셔달라. 식사 좀 잘하시라”며 “정부가 다 복구해 드리고 하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가 올라가서 잘 챙겨 마을 복구할 수 있게 다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순방 귀국 직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중대본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도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서울=이무현기자·연남스



◇6박8일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

江原日報

“지하차도 참사 1시간 전 긴급통제 요청 112 신고”

국조실 원인 규명 검찰 착수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폭우에 따른 침수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공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검찰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 드리겠다”며 징계·고발·수사 의뢰·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사고 당일 오전 7시 2분과 7시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공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일 새벽 충북도·청주시·청주 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江原日報

2023 07 18 ()
08

“사망·실종 49명 ... 지하차도 사망자 13명”

중대본 폭우 피해 집계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17일 현재까지 4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부상자는 34명이며, 전국에서 1만여명이 일시대피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집계한 잠정 피해현황에 따르면 사망자는 40명이다. 충북 오송 공평 지하차도 사망자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직전 집계인 오전 6시보다 1명 늘어났다. 이로써 오송 지하차도 사고 사망자는 13명이 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19명, 충북 16명, 충남 4명, 세종 1명이다.

실종은 9명(부산 1명, 경북 8명), 부상자는 경북 17명 등 34명이다.

일시 대피자도 증가하고 있다. 15개 시·도 112개 시·군·구에서 6,258세대 1만608명이 일시 대피했으며, 이중 추가 피해를 우려해 미귀가한 인원이 3,217세대 5,519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에서 가장 많은 1,971세대 2,995명이 대피했으며, 이 밖에 충남 1,409세대 2,684명, 충북 1,345세대 2,500명, 전북 594세대 1,008명 등이다. 농작물 피해도 기존 1만9,769ha에서 2만6,933.5ha(침수 2만6,893.8ha, 낙과 39.7ha)로 늘었으며, 농경지는 180.6ha가 유실·매몰·파손됐다.

江原日報

강원특별법 3차 발의 누가 맡나... 총선 앞두고 촉각

교육·첨단산업특례·자치조직권 중심 개정안 10월 마련 목표
도 의원 발의 추진 계획... 통과 장담 못해 선거 국면 섰법 복잡

강원특별자치도가 연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법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누가 발의를 맡을지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4월 총선과 강원특별법 국회 처리가 맞물려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적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폭적 지원

을 받았던 2차 개정과 달리 3차 개정안은 통과 여부 자체를 장담할 수 없어 정치권의 선택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법에 빠져있는 교육특구, 국제학교 설립 등 교육특례와 자치조직권, 반도체 등 첨단산업특례를 3차 개정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목표는 '10월까지 법안 마련, 연내 국회

발의, 내년 총선 전 통과'로 세웠다.

도는 3차 개정도 2차 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의원 발의'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 5월 국회를 통과한 2차 개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이 최문순 민선 7기 도정 시절인 2021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고, 야당 소속의 김진태 민선 8기 도정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와 명분이 맞아떨어졌다.

국무총리 소속의 특별자치도 지

원위원회를 통해 발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부 부처 간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소비가 크고 합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로 인해 도는 '정부 발의'는 선택지에서 제외한 상태다.

다만 3차 개정은 참여한 선거 국면이라는 점에서 2차 개정 당시와 같이 '몰아주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결국 도는 특례를 분야별로 나눠 각각 발의 후 심의 과정에서 병합하는 시나리오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역시 특례의 분야별로 난이도가 다르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더욱이 2차 개정안이 통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발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며 우선은 법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통일부, 국방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강원자치도와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1차 회의를 연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지역 투자펀드' 신설에 지방소멸기금 배분 감소 우려

정부, 기금 1000억원 유용 검토
도, 감소액 최대 141억원 추정
내일 광역단체·행안부 관련회의
유용액 규모·배분안 변경 촉각

강원도 본청	총 345억원
16개 시·군 (춘천시, 원주시 제외)	총 1064억원
강릉시·동해시	각 20억원
속초시·인제군	각 24억원
양양군	64억원
태백시·삼척시·홍천군·횡성군·영월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고성군	각 80억원
평창군·정선군	각 96억원
출처:강원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하는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를 떼어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신설하기로 해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배분되는 소멸기금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정부

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투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안이 최종확정되면 연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400억원을 배분받는 도 본청과 16개 시군에 배분되는 총액은 최대 141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도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내년 상반기 내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와 민간과 지자체가 만든 프로젝트 펀드로 구성된다. 도 관계자는 "중앙부처 회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을 지역활성화펀드 재원으로 투입한다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해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간 1조원 가운데 광역단체 15곳(서울·세종 제외)에 2500억원(25%), 기초 단체(인구감소·관심지역 107곳)에 7500억원(75%)을 배분한다.

올해 기준, 도본청은 광역단체분 2500억원 중 345억원(13.8%), 도내 16개 시·군(춘천·원주 제외)은 기초단체분 7500억원 가운데 1064억원(14.1%)을 받았다.

그러나 전체 기금 중 1000억원이 줄게 되면 도본청은 345억→310억5000만원으로, 도내 16개 시군은 1064억원→957억150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해당안이 최종확

정되면 강원도 전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액이 141억 35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잠정 예측됐다.

다만 이같은 감소액은 추정치라는 점에서 최종확정안이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중앙부처가 19일 광역단체를 불러모아 지역소멸대응기금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용액 규모와 그에 따른 배분 방식 변화는 추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광역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강원도민일보

춘천·원주 제외 강원인구 10년간 5만명 감소

작년 153만6498명, 2132명 줄어
태백·삼척 등 폐광지역 유출 심각
지역소멸 위기 지자체 대책 필요

지난 10년간 강원지역 인구가 2000여명 감소한 가운데 인구가 증가한 춘천·원주를 제외하면 5만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서울의 인구가 76만여명 줄어든 가운데 대부분 경기와 제주, 충청지역이 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은 해소되지 않았다.

17일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원지역 총인구수는 153만6498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153만8630명)과 비교해 2132명(0.1%) 줄었다.

최근 10년간 강원지역 인구수를 보면 2016년 155만806명으로 고점을 찍었고 2020년 1338명 증가한 시점을 제외하고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강원지역 18개 시·군별로 보면 10년 사이 총인구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원주로 총 3만6922명이 늘었고, 춘천(1만3300명), 횡성(1917명), 양양(64명) 등의 순으로 4개 지역만 증가세를 보였다.

폐광지역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태백(3만9428명)은 1만65명이 빠져나가 4만명대가 붕괴됐고, 삼척과 정선도 각각 9008명, 4984명 줄었다.

또 주요도시 중 하나인 강릉도 6360명이 감소했으며, 원주와 춘천을 제외하면 10년 사이 5만2354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인접한 춘천, 원주의 개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같은기간 서울의 인구는 지속적인 하향 곡선을 그려 76만6946명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서울의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빠져 나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기와 인천은 10년 사이 각각 149만6133명(12.4%), 12만3333명(4.3%)씩 늘며 수도권 인구수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게다가 비수도권 지역 중 인구가 증가한 곳은 제주(9만4446명), 충남(9만4260명), 충북(2만9430명) 등에 그쳤고, 부산(-22만672명), 대구(-14만1953명), 전북(-10만3734명) 등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우진



◇장마가 이어지면서 갠 날씨를 보인 16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에 피서객이 많지 않아 한산한 모습을 하고 있다. 권태명기자

장맛비에 동해안 해수욕장 썰렁

피서객 작년보다 66% 감소 주변 상경기도 얼어붙어

장마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동해안 해수욕장 및 주변 상경기가 얼어붙었다.

16일 도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이날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 수는 4만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만1,717명)보다 66.8%나 감소했다. 개장 후 누적 피서객 수 역시 울여름 동해안에는 41만 3,446명이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 65만 6,823명보다 37.1%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를 보였다.

상인들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고 맞는 첫 피서철이지만 지난해보다도 못한 피서철 분위기에 울상짓고 있다. 1주일째 이어지는 장마에 지난달부터 속초, 양양, 고성, 삼척 등에서 상어도 잇따라 발견되며 피서 분위기가 좀처럼 올라오지 않고 있다.

16일 경포해수욕장은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나 거센 파도로 입수객들은 눈에 띄지 않았고, 햇빛이 강하지 않아 백사장 파라솔을 빌리는 인원도 거의 없었다. 주변 식당가과 주차장도 썰렁한 모습을 보였다.

이곳 상인들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장마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박건식 경포변영회장은 “개장 이후 장마 등이 이어져 아직은 여름철 피서 분위기가 나지 않고 있다”며 “피서 절정기인 7월 중순부터는 예년처럼 다시 날씨가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안지역의 갠 날씨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동해안지역은 18일까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갠 따라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호준기자 gwhojun@

江原日報

2023 07 18 ()
01

내일까지 '최대 120mm' 다시 폭우

정체전선 잠시 물러났다
주말 다시 강원권 북상 전망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장맛비가 다시 거세지면서 18일부터 이틀간 강원지역에는 최대 120mm의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중청도와 경상도에 위치한 강한 강수대가 북동진하며 강원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수요일인 19일까지 도내 예상 강수량은 중·북부 산지와 동해안에 10~60mm, 남부 내륙과 산지 30~100

mm로 원주, 영월, 정선, 태백 등 일부 지역에는 12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된다.

영월·평창평지·정선평지·강원남부산지·태백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1주일 넘게 강원지역에 비를 뿌리고 있는 정체전선은 19일부터 남해로 물러날 전망이다. 하지만 정체전선은 주말부터 다시 내륙으로 북상해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비가 그치는 동안 도내 곳곳에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나타나면서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겠다.

기상청은 “강원지역에 150~340mm의 비가 누적되면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로 또다시 비가 내리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비가 잠시 멈추는 20~21일 사이 재해 복구 및 사전 대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오미기자 omme@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7 18 ()

/ 19

정부 권한 이양, 돈도 함께 와야

-56개 권한 지자체에 넘겨... 재정부담 해결 속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정부가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중앙정부 권한 56개를 올해 말까지 지방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부처의 권한 이양은 지역 발전과 긴밀하게 연계돼 도민들의 기대가 큼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은 더욱 확대돼 실질적인 자치분권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반면 지역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점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최근 정부 권한 이양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처별 중앙 권한 67개 중 56개를 올해 안에 지역에 넘길 계획입니다. 특히 해양수산부로부터 넘겨받는 권한은, 동해안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항만 배후단지 개발·관리와 마리나 항만 관리 규정 변경 요청 권한은, 물류와 관광 발전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권한 등은 이미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연내 이양이 확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이양 권한도 주목할 만합니다. 국가산단 유치 업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변경, 교육부의 지역대학 재정 지원, 고용노동부의 국외 노동자 대상 직업소개소·훈련기관 설

립인허가권을 지역이 갖게 됩니다. 중앙의 개입 없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자원 부담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권한만 내려보내고 예산 지원을 외면한다면 지자체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기준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9.4%입니다. 세입 예산 8조 6767억 중 자체 수입 약 30%를 제외하고 국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이 주요 자원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지역의 자원만으로 권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지방 이양 사업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권한 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이라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산과 함께 인력과 조직 지원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정부 인력 파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소통은 필수적입니다. 재정과 인력이 소요되는 분야를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한 이양을 통해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18 ()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 불업 나서라

-저조한 관심, 남은 6개월이 성공 개최 골든타임

2024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이번 청소년동계올림픽은 내년 1월 19일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2월 1일까지 세계 70여개국에서 29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4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이제 6개월 후에는 세계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를 주제로 스포츠를 통한 올림픽 가치 확산과 미래지향적 변화를 경험하는 제전이 펼쳐집니다.

2018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평창과 강릉, 정선에서 6년 만에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인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5년 전, 평화와 경제, 문화 올림픽으로서 강원인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순간이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81개 종목이 치러지는 9개 경기장도 기존의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어느 대회보다도 경제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등 최첨단 시설을 활용한 대회 운영으로 미래세대인 세계의 청소년에게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릴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6일 대회조직위원회는 G-200 기념출정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자

리에서 조직위는 대회 유니폼과 메달 B면(뒷면)을 공개하는 등 본격적인 불업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평창대관령면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5주년을 맞아 '올림픽 유산과 지역주민 역할 재조명'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도 개최됐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했던 지역주민으로서 자긍심과 올림픽을 통한 지역발전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정선문화원 주최로 개최지 문화역량을 담은 문화예술동아리 페스티벌도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4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성원은 5년 전의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비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보다 전방위적 불업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청소년동계올림픽의 핵심 가치는 문화와 환경입니다. 문화강대국으로서, 그 중에서도 강원도 문화콘텐츠를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새롭게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 State'라는 브랜드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다 공격적인 실천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6개월, 2024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의 골든타임입니다.

2023 07 18 ()

江原日報**지역-혁신도시,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해야**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은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해야 한다. 원주혁신도시에는 13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는 상생의 실천으로 '경제 효과'를 내야 할 때다. 이를 토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돼 20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자본과 기술, 사람이 모두 편중돼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압축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더 늦기 전에 중앙과 지방 간의 국가 균형발전의 기틀을 바로잡아야 한다.

혁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해 혁신주도형 경제의 지역 거점을 형성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대도시에 비해 교육, 의료 등 정주를 위한 기반 시설과 자급자족 기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주여건 개선, 임직원 정착 및 관련 기업과 시설 이전 등 상생 발전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혁신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원강수 원주시장이 최근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등을 만나 간

담회를 한 것은 긍정적이다. 원주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잇따라 자리를 마련, 상호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광해광업공단과의 첫 소통 자리에서 원 시장은 “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력 사업에 광해광업공단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력 사업은 공공기관이 예탁금을 조성해 고금리에 고통받는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시민을 위해 공공기관 주차장 주말 개방을 당부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지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도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에 관심과 애착을 갖게 된다. 그리고 원주시는 강원도 발전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공공기관들에게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혁신도시를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이전 효과가 낮다는 것은 미흡하다는 것일 수도 있다. 혁신도시의 낮은 이전 효과에 대해 잘 따져봐야 한다. 부족하다면 계획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혁신도시 주변 인프라도 정비해 정주여건을 높여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들이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江原日報

2023 07 18 ()
/ 19

‘극한호우’ 대응, 지금까지 방재 대책으론 안 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7일 오전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40명, 실종 9명 등 49명에 이른다. 또 안전사고 인명 피해는 사망 4명, 실종 1명이다. 1시간에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극한호우를 감안 하더라도 장마철 인명 피해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도내에서는 15일 오전 8시22분께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인근에서 주민 A(65)씨가 로프와 연결된 벨트

를 착용하고 길을 건너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A씨는 소 먹이를 주기 위해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 폭우로 63가구 103명이 대피하고 태백선, 영동선, 중앙선,

관광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공공 구조물이 무너지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사고도 곳곳에서 13건 발생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극한호우가 잦아지다 보니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돌출하고 있다. 정선군 군도 3호선 피암터널 구간 경사면에서는 이달 들어 네 차례 산사태가 났다. 사고가 일어난 지역은 2007년, 2019년 피암터널 공사를 마치고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된 곳이다. 재해위험도 등급도 C등급으로 붕괴위험지역(D·E등급)도 아니었지만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 산사태가 발생했다. 계속된 비로 물러진 지반에 다시 물 폭탄이 떨어지니 속수무책이다. 재해 전문가들은 이상 기후 수준이 기존 방재 대책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극한호우는 2013년 48건, 2017년 88건, 지난해는 10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어느 곳이나 언제든 재난이 닥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당장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도내에 18일까지 최대 12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이다. 당국은 더는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도민 개개인도 안전에 대해 한층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경북 등 전국에서 발생한 수해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 세월호 사

고, 이태원 압사 참사, 포항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 등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안전 불감증’, ‘당국의 대처 미흡’을 모두가 입이 닳도록 외치고 있음에도 대형 사고가

道 1명 사망·63가구 대피·열차 운행 중단
붕괴위험지역 아니어도 안심할 수 없어
침수·산사태 등 피해 반복되는 일 없어야

끊이지 않는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가 갈수록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면서 사전 대비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지하차도 비극에서 보듯 ‘인재 논란’이 뒤따르는 것은 좀 더 제대로 대처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크기 때문이다.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 공간과 저지대는 물론 산사태, 공사장·옹벽·축대·제방 등의 붕괴 위험을 사전에 예측·분석해 최소한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반복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엘니뇨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예측을 할 수 없는 미증유의 재난이 대형화하는 만큼 대책도 피해 복구를 넘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나치 다싶을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